



#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

---

2022. 9.

자본시장연구원  
선임연구위원 김갑래

# 목 차

---

I

입법 배경

II

총론적 쟁점 사항

III

공시규제

IV

불공정거래규제

V

사업자규제

VI

기타 주요 규정

VII

결어

I

# 입법 배경

# 디지털자산시장 규제 입법화의 배경

## 투자자 보호

해당 현상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평가를 별론으로 하고, 디지털자산시장이 단기간에 이미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해당 시장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사기적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

## 국제적 거래질서 확립

디지털자산거래의 초국경성에 비추어, 효율적 시장규제, 디지털자산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정책적 대응,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글로벌 육성 등을 위해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디지털자산거래 규율체계를 입법화하여야 함

## 디지털화 대응

새로운 형태의 디지털자산이 출시되고 투자자산이 토큰화 되는 현상이 확산됨에 따라, 디지털자산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육성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

# 디지털자산시장의 문제점과 대응: 자본시장 유사성

## 문제점

- 새롭게 출시되는 디지털자산이 대규모 발행 · 유통시장을 형성하며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되면서 시장참여자에 대한 정보격차, 불공정거래, 대리인비용 등의 문제가 자본시장 태동기와 유사하게 발생
  - ▶ [자본시장 복제 현상] 디지털자산시장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, 디지털자산거래업자는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집중화된 거래소 사업을 확장하였고, 탈중앙화 금융인 DeFi (Decentralized Finance) 사업자가 유사금융행위를 확대하였으며, 디지털자산시장 인프라가 자본시장 인프라를 벤치마크하며 구축되고 있음



## 대응

- 디지털자산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공시, 불공정거래금지, 사업자규제 등 자본시장과 유사한 규제체계가 국내외적으로 입법화되어가고 있음
  - ▶ [해외] 해외에서 가장 체계화된 디지털자산 입법안으로 평가 받는 MiCA(Market in Crypto-Assets)규제안,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디지털자산시장을 규율하는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안(Lummis-Gillibrand 법안), 기타 주요국 디지털자산시장 규제 입법은 모두 공시, 불공정거래금지, 사업자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음
  - ▶ [국내]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(가상자산) 규제 입법안은 모두 공시, 불공정거래금지, 사업자규제를 기본 틀로 구성

# 디지털자산시장의 특성 반영

## 디지털자산법안

### 디지털화

- 자산이 물리적 형태가 없이 디지털화 되어 존재
- 사업자의 암호키 관리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이용자자산보호의무의 핵심
- 디지털 네트워크상에서 자동화되어 거래되는 스마트계약의 실질심사 필요성

### 분산원장

-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탈중앙화 · 탈중개인화
- 일응 탈중앙화되어 발행인이 없어 보이는 경우에도 베일(veil)을 벗겨보면 공시책임 등을 부담할 수 있는 적극적 참가자가 있음
- 장기적으로 탈중앙화자율조직(DAO) 등에 대한 규제 정비 필요

### 국제화된 시장분할

- 디지털자산이 국제적으로 분산된 복수의 거래플랫폼에서 발행 · 유통
- 디지털자산시장 규제에 국제공조 중요
-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에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 유지 필요

- ❖ 디지털자산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자본시장 규제원칙을 디지털자산시장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한 것은 아님
  - 디지털자산시장의 특성은 자본시장에도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양 시장 규제체계는 수렴하는 경향을 보임

# 국제증권감독기구의 디지털자산시장 규제 원칙

- 국제증권감독기구(IOSCO)는 디지털자산시장의 공정성 및 효율성 유지와 투자자보호를 위해 기존의 증권규제 원칙이 디지털자산시장 규제의 중요한 지침이 된다고 함
  - ▶ 디지털자산시장에 적용가능한 IOSCO 증권규제의 원칙은 다음과 같음

## 공시에 관한 규제 원칙

“투자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투자정보 제공”

- 공시의 충분성, 정확성, 적정성
  - ✓ IOSCO O&P\* 16
- 이해상충 공시
  - ✓ IOSCO O&P 8

##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규제 원칙

“투자자와 시장에 대한 투자정보제공 등에 있어 반사기적 행위 금지”

- 시세조종 기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적발 및 억제
  - ✓ IOSCO O&P 36
- 불공정거래규제의 포괄성, 실효성, 효율성
  - ✓ IOSCO O&P 10, 11, 12

##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원칙

“디지털자산사업자의 선관의무 준수 및 사업건전성 유지”

- 이해상충 및 리스크 관리
  - ✓ IOSCO O&P 8, 31
- 공정한 규정을 통한 거래 신뢰성
  - ✓ IOSCO O&P 34
- 매매거래의 투명성 및 가격발견기능
  - ✓ IOSCO O&P 35
- 시스템의 안정성 및 사이버 보안
  - ✓ IOSCO O&P 33
- 청산결제의 안정성
  - ✓ IOSCO O&P 38
- 사업건전성 유지 및 이용자자산보호
  - ✓ IOSCO O&P 30, 31, 32

\* IOSCO, 2017,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Securities Regulation

# 국회발의 디지털자산업 관련 제정안 체계 비교

- [디지털자산법안의 구조적 유사성] 현재 국회에 발의된 8개의 디지털자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각각 차별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래와 같은 구조적 유사성을 보임

※ 본 발표문에서 제안하는 입법논의 사항은 일차적으로 아래의 국회 발의 제정안을 반영하였음

이용우의원안	김병욱의원안	양경숙의원안	권은희의원안	민형배의원안	윤창현의원안	김은혜의원안	민병덕의원안
제1장 총칙(§1~§3)	제1장 총칙(§1~§5)	제1장 총칙(§1~§3)	제1장 총칙(§1~§3)	제1장 총칙(§1~§4)	제1장 총칙(§1~§7)	제1장 총칙(§1~§7)	제1장 총칙(§1~§4)
				제2장 디지털자산업 육성(§5~§9)	제2장 가상자산산업발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(§8~§18)	제2장 가상자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(§8~§14)	제2장 디지털자산 금융산업 진흥(§5~§25)
						제3장 가상자산산업 지원 및 전문 인력자원 확충(§15~§17)	제3장 디지털자산 금융산업 인가(§26~§29)
제2장 가상자산사업자(§4~§25)	제2장 가상자산사업의 신고 및 등록(§6~§9)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 준칙(§10~§17)	제2장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및 이용자 보호(§4~§19)	제2장 가상자산거래업의 인가(§4~§7)	제3장 디지털자산사업자의 등록 등(§10~§14)	제3장 가상자산사업 인가 및 가상자산 발행 등록(§19~§25)	제4장 가상자산의 분류에 따른 인가 등(§18~§20) 제5장 가상자산의 발행(§21)	제4장 디지털자산의 사전투자모집과 공식 발행 거래(§30~§33) 제5장 디지털자산 금융사업자의 이용자 보호(§34~§46)
제3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(§26)	제4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(§18~§21)	제3장 불공정거래 금지 및 감독(§20~§31)	제3장 가상자산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(§8~§18)	제4장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(§15~§28)	제4장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(§26~§32)	제6장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(§22~§27)	제6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(§47~§55)
제4장 가상자산산업관계 단체(§27~§30)	제5장 가상자산협회(§22~§27) 제6장 감독 및 영업정지 등(§28~§31)	제4장 가상자산산업 관계 기관(§32~§39) ※제3장에서 규정	제4장 보칙(§19~§20)	제6장 디지털자산사업자 협회(§30~§33)	제6장 가상자산사업자 단체(§42~§44)	제9장 가상자산사업자 협회(§39)	제7장 디지털자산 금융산업 관련 단체(§56~§60)
제5장 벌칙(§31~§35)	제7장 처벌(§32~§34)	제5장 벌칙 등(§40~§42)	제5장 벌칙(§21~§23)	제7장 감독 및 처분(§34~§37)	제7장 감독 및 처분(§45~§52)	제10장 감독 및 처분(§40~§42)	제8장 감독 및 처분(§61~§68)
				제8장 벌칙(§38~§43)	제8장 벌칙(§53~§58)	제11장 벌칙(§43)	제9장 벌칙(§69~§74)



II

## 총론적 쟁점 사항

# 증권형 토큰 준거법 조항

- 토큰화된(tokenized) 증권인 증권형 토큰의 준거법에 관련하여,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디지털자산법의 적용을 배제
  - › 증권형 토큰은 본질적으로 증권이기 때문에, 해석론상으로 당연히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으며 디지털자산법 적용배제 규정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
  - › 증권형 토큰에 대한 디지털자산법 적용배제를 통해, 금융투자상품 규제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, 블록체인 혁신성을 빙자한 증권규제의 우회를 막을 수 있음
- [해외 입법례] 증권형 토큰에 대한 디지털자산법 적용배제는 미국, EU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취하고 있는 규제 원칙임
  - › EU의 MiCA규제안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MiCA의 적용을 배제 (MiCA § 2(2)(a))
  - › 증권형 토큰에 대해 디지털자산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해외 입법례는 찾기 어려움

# 디지털자산법의 역외적용 조항

- [효과주의] 디지털자산 거래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과가 “국내에 미치는 경우”에 국내 디지털자산법을 적용한다는 조항 필요
  - › 국내 디지털자산법이 역외적용 조항 없이 제정되는 경우,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행위(속지주의) 또는 내국인이 행한 행위(속인주의)에 대해서만 적용됨
  - › 디지털자산이 국제적으로 분할된 시장에서 다국적으로 유통되는 현실을 감안 할 때, 디지털자산법의 효력을 한 국가의 지역적 규제관할 범위내로 한정시키는 것은 디지털자산시장 규제의 실효성을 저하시킴
    - 현재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행위(디지털자산 시세조종 등), 사이버보안사건(해킹 등) 등이 국제적으로 조직화 되어 나타남
- [국제 공조] 디지털자산법상 역외적용 조항이 있더라도 국외에서 법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, 효율적 역외규제를 위해서는 디지털자산시장 감독기구간의 국제적 공조체계를 공고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
  - › 이미 디지털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(AML/CFT) 분야에서는 FATF 권고사항을 국제기준으로 하여 39개 회원국(우리나라 포함)이 견고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음
- [해외 입법례] 미국의 경우, Alcoa 판결, Schoenbaum 판결 등을 원용하여 디지털자산 거래에 있어서도 효과주의의 적용 가능
  - › EU의 경우, MiCA규제안은 회원국 감독기관간의 국제공조 의무를 명문화 (MiCA § 83)

# 디지털자산산업 진흥 · 육성 관련 조항

-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법 제정안은 이용자보호와 시장질서확립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지만, 동시에 디지털자산산업(가상자산산업)의 진흥 · 육성에 관한 내용을 디지털자산 시장규제와 함께 포함하고 있는 제정안도 있음
  - › 국회 발의 제정안에 포함된 디지털자산산업의 진흥 · 육성에 관한 내용으로는 블록체인산업 발전정책에 관한 국가의 책무 조항,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계획 조항, 디지털자산산업 발전기금 설치 조항 등이 있음
- [규제와 육성의 조화] 디지털자산산업의 규제와 육성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접근하되, 단일 주무부처가 규제와 육성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 유의
  - › 디지털자산법은 규제의 결과 이루어지는 시장의 질서유지와 신뢰성 확보를 통해 건전한 디지털자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효과를 발생시킴
  - › 추가적인 블록체인산업 육성 방안 등은 관련 주무부처가 개별 입법에 근거하여 추진
- [해외 입법례] 단일 법령 체계하에서 디지털자산산업의 진흥 · 육성과 디지털자산시장의 규제를 단일 주무부처가 함께 수행하는 해외 입법례는 찾기 어려움

# III

## 공시규제

발행인  
자격과 의무

발행공시

유통공시

자격과 의무

발행공시

유통공시

# 발행인의 자격과 의무

## 필요성

- 디지털자산의 발행인은 거래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, 거래자에 비해 정보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거래자를 위한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,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발행인 자격을 제한하여야 함

## 주요 내용

- [발행인의 자격]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자격을 국내외 법인으로 제한
- [발행인의 의무] 발행인에게 공시의무 및 신의성실의무 부과
  - › (공시의무) 발행인이 공모 방식으로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경우, 발행공시서류(디지털자산계획서)를 제출하고 시장참여자에게 공시하도록 의무 부과
  - › (신의성실의무) 발행인의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, 거래자에 대해 차별하거나 권리를 남용하여서는 안됨

## 해외 입법례

- EU의 MiCA 규제안은 발행인의 자격을 법인(legal entity)으로 제한하고 공시의무 및 신의성실의무를 부과 (MiCA § 4)
-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법적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국제적 입법 추세임

# 발행공시

## 필요성

- 디지털자산이 불특정다수인을 위한 시장을 형성하며 발행·유통되고, 발행인과 매수인간의 정보 비대칭이 크기 때문에 의무공시제도를 통한 정보격차의 해소가 필요
  - ▶ 디지털자산의 투자자산적 성격과 원본손실위험이 커짐에 따라, 투자정보의 제공 없는 매수인 위험부담 (Caveat Emptor) 논리가 수용되기 어려움

## 주요 내용

- [디지털자산계획서 신고의무] 기존의 백서보다 투자정보제공 기능이 강화된 국문으로 쓰여진 디지털자산계획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하고 시장참여자에게 공시
  - ▶ 구체적 사업계획, 조달된 자금 사용계획, 투자위험, 보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 등 실질적 투자정보가 디지털자산계획서의 필수 기재 사항으로 입법화되어야 함
- 비트코인과 같이 발행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, 해당 디지털자산거래를 중개하며 수수료를 수취하는 디지털자산사업자가 발행인에 준하여 발행공시 의무를 이행

## 해외 입법례

- EU의 MiCA 규제안은 구체적으로 기술(detailed description)되어야 할 발행인 백서의 주요 투자정보를 규정화 함 (MiCA § 5)
- 미국 등 주요국도 구체적인 투자정보가 포함된 백서발행을 의무화하고, 중요투자정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입법 트렌드를 보임

# 유통 공시

## 필요성

- 디지털자산계획서(발행공시)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이행(불이행) 된 경우, 해당 중요투자정보를 즉시 시장참여자에게 공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
  - ▶ 디지털자산 락업(lock-up) 배분계획의 이행, 마일스톤 달성 여부 등의 정보는 해당 디지털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투자정보로서 시장참가자에게 공정하고 즉각적인 방식으로 공시되어야 함

## 주요 내용

- [계획서 변경사항 신고의무] 상장 후 디지털자산계획서의 중요 내용이 변동되거나 이행(불이행)되는 경우, 해당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신고 및 공시의무를 부여
- 디지털자산거래업자는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상장(거래지원)규정을 통해 발행인에게 추가적인 수시공시의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, 시장 풍문의 사실여부 또는 급격한 가격·거래량 변동에 대해 발행인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해당 사항을 공시하는 조회공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

## 해외 입법례

- EU의 MiCA 규제안은 거래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백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, 발행인이 해당 백서를 수정하고 공시하도록 함 (MiCA § 11)
- 미국의 “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”(Lummis-Gillibrand 법안)은 투자성은 있으나 권리성이 명확하지 않은 디지털자산을 보조자산(ancillary asset)으로 분류하여 상품(commodity)으로 의제하고, 증권법상의 정기공시의무를 적용 (Lummis § 301)



# IV

## 불공정거래규제

미공개중요  
정보이용  
행위 금지

시세조종  
금지

부정거래  
행위 금지

시장감시  
시스템

유치 금지

금지

유치 금지

시스템

#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금지

## 필요성

- 디지털자산시장에서 내부자 등이 투자정보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,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며, 건전한 디지털자산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용이 시장불신으로 인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,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

## 주요 내용

-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한 자가 해당 정보를 자신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
  - ▶ 입법 과정에서 내부자 등의 범위, 정보의 중요성, 미공개 기준, 금지되는 이용행위유형 등에 관한 구체적 요건이 논의되어야 함

## 해외 입법례

- EU의 MiCA 규제안은 내부자정보의 불법공개, 해당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, 해당 거래의 권고행위를 폭넓게 금지 (MiCA § 78&79)
- 미국에서 디지털자산은 상품으로 분류되며, 상품거래법령(7 USC § 9, 17 CFR § 180. 1)에 따라 내부자거래 규제가 가능
  - ▶ 미국 SEC는 적극적으로 디지털자산의 증권성을 인정하며 증권법상의 내부자거래 금지규정 적용 (코인베이스 내부자거래 사건)

# 시세조종 금지

## 필요성

- 디지털자산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정보인 가격정보를 인위적으로 조작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시장참여자를 기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, 개별 거래의 사기적 요소를 입증할 필요없이 시장에서의 시세조종 행위를 사기적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할 필요가 있음

## 주요 내용

- 디지털자산시장의 자유로운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을 인위적으로 왜곡시키는 시세조정을 금지
  - › 입법 과정에서 시세조종 행위의 구체적 유형, 시세조종의 예외가 되는 시장조성 요건 등이 논의되어야 함

## 해외 입법례

- EU의 MiCA 규제안은 다양한 형태의 시세조종을 유형화하여 금지 (MiCA § 80)
- 미국 상품거래법상 디지털자산의 시세조종 금지 (7 USC § 9, 17 CFR § 180.2)

# 부정거래행위 금지

## 필요성

- 복잡다변한 디지털자산시장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,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모두 포섭하여 규제하기 위한 포괄주의 규정이 필요함

## 주요 내용

- 디지털자산의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부정거래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
  - ▶ 부정거래행위 예시
    - 부정한 수단, 계획 또는 기교의 사용행위
    -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유포, 부실표시 또는 중요 기재(표시)의 누락행위
    - 거짓시세 이용행위
    - 디지털자산거래 목적 또는 시세변동 목적으로 품문의 유포, 위계의 사용, 폭행 또는 협박 행위 등

## 해외 입법례

- EU의 MiCA 규제안은 포괄적 부정거래행위 금지조항을 두고 있지 않지만, 내부자거래 금지조항 및 시세조종 금지조항을 폭넓게 적용하고, EU 회원국이 자국의 디지털자산법에 개별적으로 불공정거래 금지조항을 추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규제공백을 매울 수 있음
- 미국 상품거래법은 디지털자산거래에 관한 부정거래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(7 USC § 9, 17 CFR § 180.1). 바이든 정부는 CFTC가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독을 할 것을 주문 (디지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)

# 시장감시시스템

## 필요성

- 감독당국이 디지털자산시장의 대량 거래를 개별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, 디지털자산사업자가 자동화된 이상거래탐지시스템(FDS)을 구축하여 복잡하고 다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심리할 필요가 있음
  - ▶ 특히 디지털자산시장이 국제적으로 분할되어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은 매우 중요

## 주요 내용

- 디지털자산거래업자에게 해당 디지털자산시장의 거래, 주문·호가, 품문 등을 감시하고, 가격 또는 거래량을 비정상적으로 변동시키는 이상거래를 적발하여 심리하며, 위법이 의심되는 상황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업무를 부여 (자율규제업무)
  - ▶ 복수의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시장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사업자협회를 통해 호가정보 및 거래정보를 통합한 시장감시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(Deloitte, 2021, Market Manipulation in Digital Assets)

## 해외 입법례

- EU의 MiCA 규제안은 디지털자산사업자가 불공정거래 감시·적발시스템을 갖출 것을 사업자 승인 요건으로 함 (MiCA § 54(2)&61(9))
- 미국의 “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”은 디지털자산거래소에 시장감시의무를 부여 (Lummis § 404)

V

## 사업자규제

진입규제

행위규제

# 진입규제

## 필요성

-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디지털자산사업자의 “인적, 물적, 재산적 요건을 심사하고 재무건전성과 건전한 영업질서의 준수 여부를 감독”할 필요가 있음 (대법원 선고 2000도357 취지 적용)

## 주요 내용

- 미등록 디지털자산업 금지, 진입요건 및 절차, 진입요건 유지요건, 변경등록 신청, 등록취소, 이해상충 방지체계, 외국 디지털자산사업자 등록 등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
  - › 입법 과정에서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진입규제와 건전한 육성을 조화하며 진입요건의 수준을 정하여야 함

## 해외 입법례

- EU의 MiCA규제안 등 주요국 디지털자산법안은 모두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인적, 물적, 재산적 요건에 관한 진입규제 조항을 두고 있음

# 행위규제: 신의성실의무

## 필요성

- 대규모로 성장한 디지털자산시장에서 사업자가 전문성, 정보력, 경제력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, 신의성실의 원칙과 이용자이익 보호의무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음
  - ▶ 특히 디지털자산법령이 정비되지 못하고 공정한 계약 관행이 확립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, 시장신뢰성 유지를 위해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는 신의칙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큼

## 주요 내용

- 신의성실의무는 이용자를 위한 선관주의의무, 이용자이익 보호의무, 자기계약금지, 최선집행의무 등으로 구체화됨
  - ▶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은 디지털자산법상의 **이용자보호**가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인 것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기능을 함

## 해외 입법례

- 신의성실의무는 신인의무, 최선집행의무 등 디지털자산사업자 행위규제의 핵심 원칙으로서 EU의 MiCA규제안 등 주요국 디지털자산법안에 포함되어 있음



# 행위규제: 디지털자산 보관의무

## 필요성

-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예탁금은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제도적으로 명확히 분리보관되지만, 이용자로부터 수탁 받은 디지털자산의 구분관리가 제도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파산절연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수탁자산 보관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

## 주요 내용

-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수탁 받은 디지털자산을 동일종목·동일수량의 원칙하에 자기 고유재산과 분리보관하고 구분관리하여야 함
  - ›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수탁 받은 디지털자산의 보관업무를 보관관리사업 자격(보안기준 등 충족)이 있는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
  - › 사이버보안 차원에서, 디지털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수탁 받은 디지털자산의 콜드월렛(cold wallet) 의무보관비율을 제도화

## 해외 입법례

- **MiCA규제안**에 따르면, 고객의 디지털자산을 보관하는 디지털자산사업자는 파산절연 등 고객자산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(MiCA § 63)
- **미국 뉴욕주 비트라이선스** 규정에 따르면,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이용자가 예탁한 디지털자산은 해당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(23 CRR-NY 200.9). “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”도 같은 취지의 조문 포함
  - › 미국 SEC는 디지털자산증권의 매매, 수탁, ATS 운영에 종사하는 브로커-딜러의 고객자산보호의무에 대한 SEC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(SEC, 2021, Release 34-90788) 하였는데, 해당 고객자산보호의무는 보관관리업무를 하는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도 적용 가능

# 행위규제: 불완전판매 금지

## 필요성

- 디지털자산거래는 가격변동성과 원본손실가능성이 큰 고위험투자라는 점에서, 이용자를 정확히 파악하고, 해당 이용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디지털자산을 추천 받고, 해당 자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산을 구매하는 투자권유준칙 및 불완전판매 규제가 필요

## 주요 내용

- 디지털자산사업자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, 이용자확인 의무, 적합성 · 적정성 원칙, 설명의무 등을 법제화하여야 함
  - ▶ 투자권유가 없는 비대면거래에 있어서도, 이용자확인 의무, 적정성 원칙, 설명의무(디지털자산 영문 백서의 국문화 등)는 적용됨

## 해외 입법례

- EU의 MiCA 규제안은 디지털자산 거래에 관해 자문하는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고객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적합성 · 적정성의 원칙을 적용 (MiCA § 73)

# 행위규제: 이해상충 방지

## 필요성

-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디지털자산사업자의 겸업 규제와 내부통제 규제가 없었던 점에서, 현재의 디지털자산사업자 이해상충 규제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음

## 주요 내용

- 디지털자산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이용자간, 이용자 상호간의 이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
  - ▶ 입법 과정에서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의 파악·평가, 공시,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논의하여야 함

## 해외 입법례

- EU의 MiCA규제안 등 주요국 디지털자산법안은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다수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
  - ▶ 특히 미국 SEC는 디지털자산사업자의 거래소기능과 예탁기능, 거래소기능과 시장조성기능의 분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

# 기타 행위규제에 관한 입법 논의사항

- [명의대여의 금지]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제3자가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하여 영업을 하는 것을 허락하여서는 안됨
- [자료의 기록·유지]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의 유지·운영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일정기간 유지할 의무를 부여
- [수수료 규제]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해 공정한 부과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시하도록 함
  - ▶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정해진 수수료 이외의 재산상 이익을 수취하지 못함
- [광고규제] 허위·과장광고 금지 등에 관한 일반 원칙을 규정화하고, 구체적인 광고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하위 법령으로 규율
- [서비스제공 중지 금지] 디지털자산사업자가 매매·청산·결제, 보관관리, 입출금 등의 서비스업무 제공을 정당한 사유없이 중지하여서는 안됨
- [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] 디지털자산사업자의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로 인해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

# VI

## 기타 주요규정

# 디지털자산업협회

## 필요성

- 디지털자산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, 효과적인 이용자 보호, 디지털자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, 디지털자산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를 조직하여 업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참여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음
  - ▶ 복잡다변한 디지털자산업계에서 사업자들이 전문적이고 상호합의에 기초한 협회규정을 통해 자율규제, 사업자 윤리 및 베스트프랙티스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

## 주요 내용

- 입법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디지털자산업협회의 주요 업무로는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자율규제, 사업자의 법령준수에 관한 지도·권고, 이용자와의 분쟁조정 및 민원처리,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 등을 들 수 있음
  - ▶ 협회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금지, 협회규정 변경에 관한 감독기관 보고의무 등에 관한 규정도 입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함

## 해외 입법례

- 미국의 “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”은 디지털자산 감독기구간의 효율적 공조를 강조하며 자율규제 및 디지털자산협회에 관한 제도화 근거를 마련 (Lummis § 807)
- 스위스, 일본, 싱가포르의 자율규제기구(SRO)를 활용하여 디지털자산거래의 규제공백을 메우고 있음

# 스테이블코인

## 필요성

- 테라-루나와 같은 알고리즘스테이블코인이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디지털자산시장의 안정성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, 자산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시스템위험, 결제위험, 대량상환요청위험 등이 부각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

## 주요 내용

- 입법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음
  - 스테이블코인의 정의 (알고리즘스테이블코인 배제 여부)
  -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안정성을 담보하는 준비자산 요건
  -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허가 및 변경허가의 요건
  -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계획서에 기재되어야 할 공시 사항

## 해외 입법례

- EU의 MiCA 규제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자산준거토큰(ART) 및 전자화폐토큰(EMT) 나누어 규제 (MiCA Titles III&IV)
- 미국의 “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”은 “책임있는 지급혁신”의 장(title)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체계적으로 규제 (Lummis Title VI)

**VII**

**결 어**



# 국내 디지털자산법 제정안의 입법방향

-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의 지속가능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고, 현재 발생하는 규제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추진





**Thank You!**